

‘조국정국’ 가고 ‘예산정국’ 온다...513조 예산전쟁 시작

‘수퍼예산’ 심사...조국 후폭풍 · 총선 변수

“확장적 재정 필요” vs “불필요 예산 삭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전쟁이 막을 오른다. 국경감사를 마친 여야는 22일 정부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28일과 29일에는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

사를 진행한다. 내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진행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상 최초로 500조원 규모를 넘는 ‘수퍼예

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의 증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9.3% (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집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등에 중점 투자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재정을 방만히 운영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만큼은 그야말로 ‘현미경 심사’로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필요한 재정은 투입하되, 쓸데없는 세제 투입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심사를 전후로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경감사를 맡겼던 조국 정국의 여진이 여전히 정치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예산심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 된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등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필수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6일 넘긴 12월8일 새벽에야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유승민 “12월 창당” vs 손학규 “기회주의자”

유승민 “12월 정기국회까지 마무리”...손학규 “빨리 나가라”
안철수계 ‘출당’ 가능성...의총서 변혁+호남계 의결 가능성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시계’의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직위해제’ 결정으로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와 퇴진파인 유승민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유 전 대표는 2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12월 창당을 못 박았다.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자 더이상 손 대표 등 당권파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저희의 행동을 결심(신당 창당)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손 대표 등 당권파가 여권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분당’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유 전 대표를 향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한 번에 터뜨리는 등 당 내용은 수습은커녕 양측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손 대표는 “(유 전 대표) 스스로 원칙주의자라 자부하지만 원칙 없는 전형적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12월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빨리 나가라. 자기가 만든 당을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완전히 깨진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 전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당에) 받아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받아주지 않으면 신당 창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탈당은 하지만 한국당과의 무조건적 통합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유승민계 15명 의원의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도 이같은 뜻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무조건적인 통합은 없다”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변화에 동의하고 우리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한다면 통합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다. 협상해도 패배치 않고 우리 길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철수계인 권은희 의원 등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변혁 행보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분당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거취는 ‘출당’ 조치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당에서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같은 분은 불편한 동거 지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치적 판단 시점이되면 변혁 15명도 있고, 호남계로 분류되는 내분(박주선, 주승용, 김관영, 김동철)도 있다. 나머지 3-4명은 손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데 호남계만 동의만 정치적 해법(출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 당헌·당규 상 전체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있을 경우 출당 조치가 가능한 만큼, 변혁이 탈당 결심이 굳히고 의원총회를 소집할 경우 손 대표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안철수계 6인에 대한 출당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정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박지원 “조국 총선출마? 직접 국민심판 받겠다 생각할 수도”

“조국 후임, 진전 상황보면 전혜철 의원이 확실한 듯”

박지원 무소속 의원(대안신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조국 전 장관으로서 일정한 검찰개혁의 엔진은 걸었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 집토끼를 강하게 물쳐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출마설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지금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단정은 피했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은 검찰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특히 정경

심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와 재판 진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민주당에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부분”이라고 했다.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전혜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임설과 부인에 대한 “(사임설 부인은)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숙내는 (총리직을) 떠나 한번 (선거를) 뛰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과연 (차기 총리) 책임자

를 찾을 수 있을지를 대통령으로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중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고, 총리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 이후 다시 한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은 것. 양정철 민주연구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것을 총선 행보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저희들도 엄청나게 보호했고 인물은 되시는 분”이라며 “아마 영입이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지역보다는 비례대표 이런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